

## 6자 회담

서경태

IAEA 핵물질 보장조치 사찰관

**지**난 9월 19일 극적인 타결을 본 것 같던 6자 회담이 하루 만에 북, 미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안개 속에 빠졌다는 기사를 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은 모두 6자 회담의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인해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한지도 알고 있다.

다만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법을 간단명료하게 제시를 못하는 이유는,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이나 현물 제공 등의 자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무리한 요구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도발적인 언행 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해 관계가 가장 첨예한 한국, 북한,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현상황을 조명해 보고,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 북한의 입장

북한이 지금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어려운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 경제 활동의 기본은 에너지이다. 현재의 북한은 안정적인 에너지의 확보없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어떠한가? 이에 관해서는 한국의 정보 기관이나 많은 연구소 등에서 이미 검증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북한의 에너지 자원은 이미 고갈되었고, 내놓을 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수풍과 장전 등으로 유명한 수력 발전은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고,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는 화력 발전소들은 기기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적절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한다.

열량이 높은 석탄은 더 이상 파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파 들어가, 일부 탄광은 서해안 밑바닥까지 도달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갈탄이 생산되고 있으나 이는 열량이 낮아 중유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적절한 열량을 낼 수가 없다.

이것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서에서 뿐만 아니라 6자 회담에서 중유 공급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송전선로의 노후로 인해 그나마 생산된 전력의 많은 부분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어려운 에너지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못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먹을거리를 찾아 만주 벌판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에 대한 대답을 그들로부터 들어보면, 북한 체제의 유지와 인민을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의 안전을 볼모로 하여 북한 체제 유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과 그리고 미국이 경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원하는 국가나 단체에 판매할 수도 있고, 만약 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일본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며,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절대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문서화하여 보장하여 주고(북·미 불가침조약),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원을 해 주어야만 하고, 충분한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이 확보된다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북한의 요구 사항이다.

이렇듯 허황되기도 하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 조건을 가지고서도,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이해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6자 회담이란 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일단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이 성공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직면한 경제 사정과 정치 문제에 대해 서방 세계에 보다 솔직한 표명을 못하고 있으며 체제 내부의 단속을 위해 전전공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 미국의 입장

미국은 9.11 이후, 테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다. 자국에 대한 테러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테러의 싹을 없애야 할 뿐만 아니라, 싹을 키우는 씨와 그 씨가 자라 싹을 만들수 있는 토양까지도 제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고, 정책 방향이다.

미국은 악의 축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이란, 리비아, 북한 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아직도 이란과 북한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테러 단체에 판매를 하여, 그 테러 단체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목적을 이루고 싶으나, 서방 세계와 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선불리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 미국은 원치 않는 6자 회담이라는 틀에 마지못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용 원료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인력, 시설, 장비를 제거하여 테러 단체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량 국가에게는 지원이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용 원료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에 협조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맞게 핵무기용 원료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 후에야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합당한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시각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용 원료의

양이나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성능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불확실성과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는 북한에게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나 6자 회담이라는 외교적인 틀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이해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 내에 핵물질은 존재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 중국, 러시아, 일본의 입장

먼저, 일본은 현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송 일본인의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접근일 뿐이다. 일부 납치의 의심이 드는 사항도 있으나 대부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간 일본인들에 대해 일본 사회는 별 무관심하다.

일본은 6자 회담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상 확립에 중요하고, 6자 회담의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정치적 고려하에서 선택한 것이 북송 일본인들의 송환인 것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에 대해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만약 6자 회담이 완전히 결렬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확인되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일본은 자국의 보호라는 명분하에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고, 어쩌면 일본이 으근히 원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그리고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과 북송 일본인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에 대한 대가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의 경제력은 이를 지불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6자 회담에의 참여 이유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동북아에서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6자 회담이 결렬될 경우, 대만과 일본이 자위 차원에서의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것이 확실하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최근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두 나라는 어느 정도의 비용은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어 보이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의 입장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제일 답답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이 제일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한국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이다.

이것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국민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항상 주도권을 북한에게 빼앗긴 상태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인상이 짙다.

이번 북한 핵문제도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전혀 무시한 채,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경제 지원이라는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이 또한 한국의 입지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용 지불에 있어서는 한국이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6자 회담에서 큰 목소리를 내며 주도적으로 회담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현재까지는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6자 회담이 표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6자 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간의 극심한 불신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미국과 북한은 단 한 번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본 적이 없이 항상 적대 관계였다. 한국전쟁 때의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것이 협력 관계였다면 협력 관계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북, 미간 제네바 합의는 협력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양국 간의 이해에 따라 체결된 합의일 뿐이다. 그것도 북한과 미국 간에 누가 먼저 위반하였느냐를 가지고 비난을 하다가 결국 결렬되어 양국 간에 느끼는 불신감은 대단한 것이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지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200만kW의 전기 지원이라는 한국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이번 6자 회담에 나오지 않고,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남북 적십자 회담에 더욱 주력하여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직접 이끌어 내려고 했을 것이다.

이만큼 북한은 안정된 에너지 확보와 경제 지원이 주요 관심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경수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경수로 2기에서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현재로서는 최상의 성과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과 자국민에 대한 테러에 관해서는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서 심하게 말하면 거의 정신병 수준의 우려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핵물질 보장 조치하에 있는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재처리를 하여 그 안에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을 쫓아내고, 감시 장비를 철거한 후, 사용후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해낸 원죄가 있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과거 행동으로 미루어 경수로를 지원하였을 시에 언제든지 북한이 재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대로 경수로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수로 지원시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사찰을 받겠다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반면에 북한은 경수로 지원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무조건 핵무기용 원료 및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나면, 그때에 가서 경수로를 지원하든 증유를 지원하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 보겠다는 미국의 말을 따를 수는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핵무기 카드가 현재로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 이 카드를 버리고 두 손을 들었을 때는 더 이상 버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 카드를 포기하고 난 후 미국이 지원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사정은 몇 년을 기다리거나 버틸 만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렇듯 평행선을 긋고 있는 양국 사이에서, 그리고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려하는 다른 6자 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번에만말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의 몫이다. 한국은 연간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잠시 중단된 신포 경수로 건설에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다.

미국이 극도의 불신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피해 의식에 불과하다.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핵물질 보장 조치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용후연료에 대한 전용도 감시가 가능하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6자 회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미국에 대해 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제,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시간표를 제안해 보기로 한다.

1, 한국은 북한에 연간 200만kW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송전선로의 건설을 시작한다. 건설이 시작되면 북

한은 즉시 NPT에 복귀하고, 과거 신고된 핵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는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관들이 사찰을 재개할 때에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중유와 석탄 등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시작한다.

2. 송전선로가 완공되어 북한에 송전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에, 북한은 추가의정서에 가입한다. 추가의정서가 발효되면, 한국은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한다.

3. 북한이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 조항, 즉 최초보고서와 분기, 연간보고서 등의 제출 시한을 어기지 않고 이행하였을 때에,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한다.

4. 국제원자력기구는 핵물질보장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에 따라 북한의 핵 시설과 미신고된 시설에 대해 특별 사찰을 실시한다. 특별 사찰의 결과,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무기의 원료 물질은 미국, 러시아, 또는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송하고, 기타 핵물질은 봉인을 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하에 둔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시설(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 등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에 따라, 주요 기기와 설비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송하고, 기타 구조물 및 이송이 불가능한 설비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폐기한 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를 확인한다.

5. 신포 경수로가 완공된 후, 북한 내에 사용후연료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없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해 검증되었을 때 핵연료를 공급한다. 신포 경수로에서 전기가 생산될 때에 한국은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검한다.

이것이 필자가 제안하는 시간표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위의 조건들을 준수할 시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겠다는 보장

을 문서로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에 보증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에 송전선로와 경수로 건설을 해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시에는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성실하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검한다면, 전기 공급, 경수로의 건설과 연료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고, 미국은 이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거나 사찰을 방해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으로의 송전을 중지하면 되고, 경수로 건설 또한 중지하면 된다. 다른 나라들도 중유와 석탄 등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다른 편에서는 이것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다.

필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대 11조원으로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천문학적 비용에 대해 한국의 국민들이 이해를 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만약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용 원료 물질과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을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의 당사국들이 검증팀을 결성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와 6자 회담 당사국, 그리고 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한국 정부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필자 주(\*) : 농축 시설을 이용한 고농축 우라늄의 추출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또한 위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둔다.